

한·미 FTA 제2차 협상결렬에 따른 향후 전망과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

I. 제2차 한·미 FTA 협상결렬과 제3차 협상 전망

지난 7월 14일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1일, 건강보험 약가 책정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측의 강력한 반발로 결렬되고 또다시 13일 무역구제와 서비스분과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올 9월 개최될 제3회 협상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다.

미국이 타 분과 회의마저 취소시키면서까지 불만을 나타낸 것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의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그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 해도 전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가격대비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만 선별, 보험 대상 약품 목록에 등재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용 약품이 아닌 경우와 처방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급여 적용대상인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일한 효능을 지닌 약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병원에서는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더 비싼 약을 처방하려고 한다. 이 때 이윤이 많이 남는 비싼 약은 보통 오리지널 약품이고 값이 싼 약은 대부분 복제 약품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모든 약이 건강급여 적용 대상으로 무조건 등재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약품은 겨우 11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복제품인 제네릭 약품인 반면 미국은 대량의 비용, 시간, 인력을 투자해 엄청난 양의 오리지널 약품을 보유하고 있어 복제 약품이 난무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눈엍가시였을 것이다.

물론 신약을 개발했을 때 개발자 또는 개발회사에 20년 간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만 미국은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오리지널 약품이 계속 고가로 책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우리나라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미국의 오리지널 약품가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예상되어 제2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와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가 극복하지 못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혀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의약품 부문을 제외한 상품 분야 양허안 틀에는 양국이 모두 합의하였고 서비스, 투자 유보안도 교환하는 등 제2차 협상에서의 성과도 있었다.

향후 3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교환했던 양허안 및 유보안을 토대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본격적 관심사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어 양측 협상단의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1. 한·미 FTA 예상영향 및 협상방향

1) 농업부문 예상영향

□ 농업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

▣ 한·미FTA 3차 협상 향후 일정

8월 중순	상품·섬유·농산물 양허안 일괄 교환
3차 협상 전	서비스·투자 유보안 중 관심사항(request) 교환
9월 5~6일	3차 본협상 미국 개최
10월	4차 본협상 서울 개최
12월	5차 본협상 미국 개최
2007년 3월	공식협상 마감
6월 30일	미 행정부 신속협상권(TRA) 소멸

▣ 한·미FTA 3차 협상 향후 일정

분 야	쟁점 및 전망
상품·섬유·농산물	- 농산물, 섬유 양허안 틀 합의 - 3개 분야 양허안 8월 중순 일괄 교환 - 품목별 개방 단계 및 이행기간 협상
개성공단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 미국의 혁신 신약 인정 방식(혁신 시약특허권 연장 여부 등)
서비스·투자	- 유보안(개방불가)중 관심분야 목록(request list) 교환, 논의 -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및 비자 쿼터 설정 여부
금융서비스	- 국경간 거래 허용 범위, 투명성 문제
자동차	-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개편 및 표준의 투명성
SPS (위생검역)	- 분쟁해결 기구 이견 (한국: 접촉선 지정, 미국: SPS 위원회 설치)

우위에 있는 미국산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의 생산액이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

▶ 농업 생산액('04) : 36조원(쌀 10, 축산 10.8, 채소 7.7, 과실 2.9 등)

○ 모든 농산물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검역상 수입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연간 약 1조 8,600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 추정('0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 미국산 수입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산 수요대체 정도를 계수화한 교차탄성치의 오차범위를 감



안시 최소 1조 4,300억원에서 최대 2조 2,700억 원 수준

▶ 쌀을 제외한 축산, 과일, 곡물, 채소/특작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

○ 그러나, 실제 피해 규모는 관세철폐기간 등 협상결과와 검역상 수입제한 유지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

- 관세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검역상 수입제한이 유지될 경우, 농업생산액 감소는 연간 약 9,000억원으로 축소

□ 산업별로 보면, 축산과 과수부문, 식용콩 등 일부 곡물부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채소·화훼부문은 영향이 적을 전망

○ 기존 수출품목과 파프리카 등 새로운 품목의 수출기회 확대

▶ 신선농산물 대미 수출('05) : 배(2,260만불), 화훼(290), 버섯(60)

2) 농업협상방향

□ 양허협상 대응방안

○ 쌀은 농가경제 비중('04년 기준, 농업 생산액의 27.6%, 농업소득의 49.9%)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

○ 축산물·과일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으로 피해 최소화

- 양허제외/ 점진적 관세철폐/관세 부분 인하 등 검토

○ 상대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유연하게 대응

□ 협정문 대응방안

○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제도는 관세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장치로 필요한 제도이므로 최우선 과제로 관철

○ 수입쿼터(TRQ)관리방안은 현재의 운영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 검역/위생(SPS) 문제는 WTO 등 국제규범 준수 여부 등의 논의를 위한 양국간 접촉창구 개설 수준으로 대응

- 특정 품목 관련 검역현안은 FTA 협상과 별도로 논의토록 유도

2.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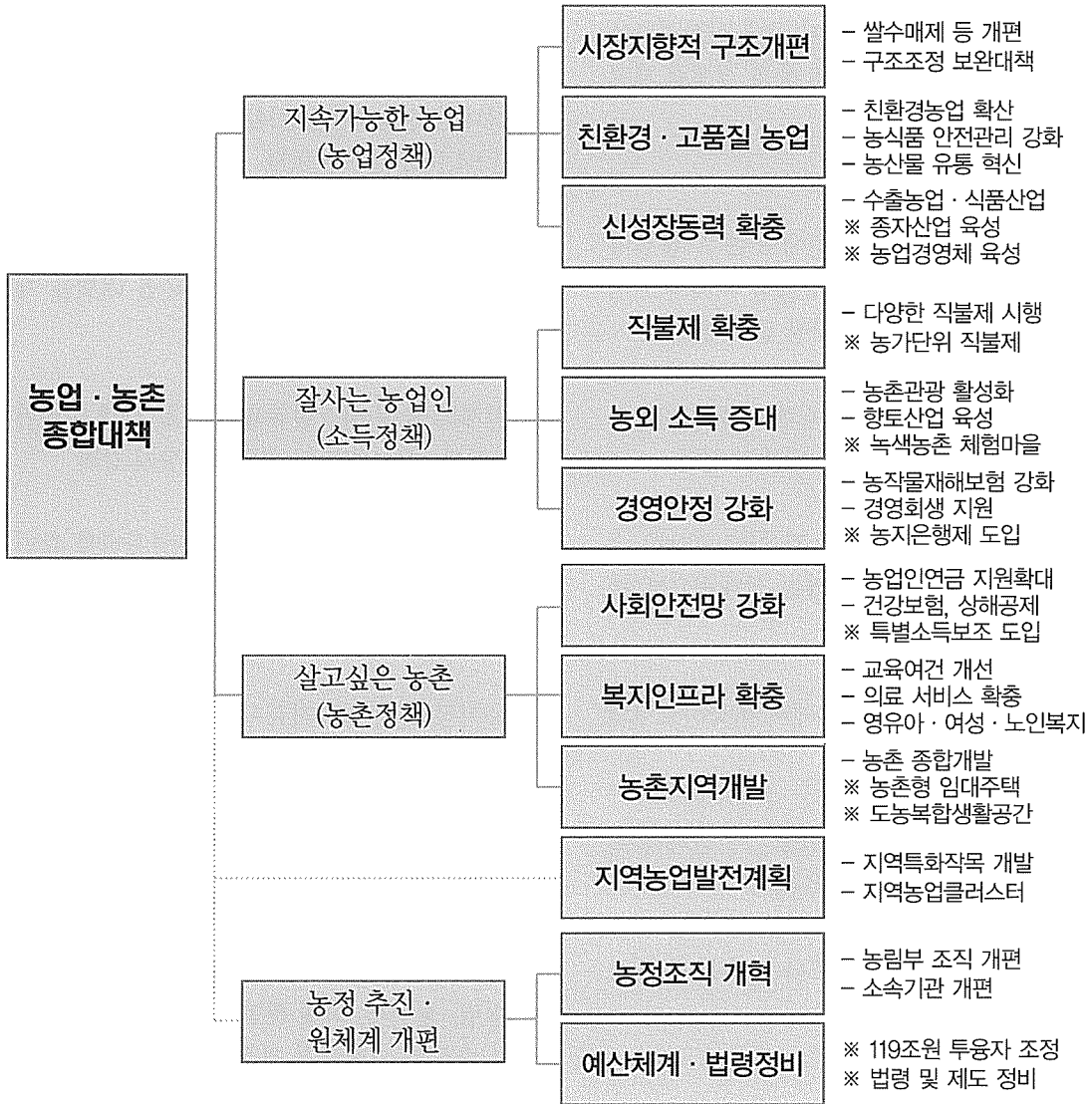
**농업정책은 산업정책으로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 농촌대책을 대폭 강화**

① 농업정책 :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평가 제고

- 가격경쟁력 제고 : 영농규모화, 시설현대화, 기계화 및 경영 혁신으로 생산비 절감

- 품질경쟁력 제고 : 우수품종 개발, 친환경 농업 정착, 안전성 제고, 브랜드화 등을 통해 시장 차별화

- 농산물 유통혁신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 다양한 직거래 확충



※ 재원 : 119조원을 기초재원으로 활용

② 소득정책 : 전업농의 경영안정장치 마련, 고령 중소농의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지원차별화로 농업내부 양극화 해소

③ 농촌정책 : 농촌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개방화 시대에 농업성장의 활로를 찾고 도·

농 균형발전 실현

3.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 대책

수입선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종별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가축질병 예방에 역점

◇ 수입선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종별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가축질병 예방에 역점

1) 예상 영향

□ 쇠고기는 큰 가격차(2.6배)에도 불구하고, 품질차이 등으로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40%) 철폐시 한우시장 잠식 우려

○ 수입육 시장은 호주·뉴질랜드 등 제3국산 수입량이 상당부분 미국산으로 대체될 전망

□ 돼지고기, 닭고기는 현행 관세(25~20%) 수준을 고려할 때, 가격인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전망

○ 캐나다, EU, 태국산 위주에서 미국산으로의 수입국 전환효과 예상

□ 탈지분유 등 유제품과 천연꿀은 고관세 품목으로 관세철폐시 상당한 피해 우려

○ 신선우유·계란은 신선도나 운송문제 등으로 피해가 미미할 전망

2) 경쟁력 제고대책

□ UR 협상 이후 개방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투융자에 힘입어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이미 진전되었고, 품질 고급화·차별화로 신선 냉장육·고급육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 마련

▶ 축산전업농과 그 사육비중 : (95) 5,200호, 42.3% → (05) 15,000, 73.4

▶ 쇠고기 1등급/돼지고기 A등급 출현율 : (95)

12.8/6.3% → (05) 47.9/37.1

▶ 국내산 시장점유율(04) : 쇠고기 44.2%, 돼지고기 84.9%, 닭고기 90%

□ 고품질·브랜드화·안전성 등 품질경쟁력 제고와 가축질병 사전 예방 등 품목별 대책을 계속 추진

□ 현재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확실한 시장차별화 제도 정착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

○ 소비자가 쇠고기의 품종과 사양관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05년부터 시범추진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08년부터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실시

○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대 추진

- '07년 영업장 면적 300㎡ 이상(552개)에서 시작하고, '08년부터는 200㎡ 이상(2,011개)으로 확대 추진(관계부처 협조)

○ 질병, 풍수해, 화재 뿐만 아니라 설해로 인한 가축과 축사의 피해까지 보장되도록 가축공제 제도를 확대

